



주간통일정세 2013-04(2013.01.21~01.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0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성형' 의혹보도에 '발끈'(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최근 보도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형 의혹에 대해 "쓰레기언론들의 너절한 매문(賣文) 행위"라고 비난함.
- 논평은 "최근 일부 불순 적대세력과 매문가(어용언론인)들이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 앞장에는 여전히 모략에 이끌이 난 남조선 매문가들이 서 있다. 남조선의 극우보수언론들은 우리 최고 수뇌부의 존엄과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별의별 악설을 다 고안해내고 있다"고 비난함.
- "우리는 이것(성형 논란)을 영도자와 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극도의 무지몽매로, 언론의 초보적인 체모마저 갖추지 못한 쓰레기 언론들의 너절한 매문행위로 단호히 일축한다"고 강조함. 이어 "백두산위인의 태양의 존안에 얼마나 위압되고 얼이 나갔으면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술 의혹설까지 꾸며냈겠는가"라며 "우리 최고 수뇌부에 대한 적들의 모략보도는 최고 존엄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으로서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덧붙임.
-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부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모략선전에 장단을 맞추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국내에서까지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속히운다'는 비난을 산 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중국 언론을 비난함.

● 北, 제4차 당세포비서 대회 28일 개최(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를 제도화해 오는 28일 제4차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지난 23일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를 제도화해 필요한 시기마다 소집기로 하고 "2013년 1월28일에 소집하는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를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로 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함.
- 노동당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세포비서 대회를 제도화할 데 대하여'란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1991년 5월에 열린 전국 당세포비서 강습회를 '노동당 제1차 세포비서 대회'로, 1994년 3월 열린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를 '노동당 제2차 세포비서 대회'로, 2007년 10월에 열린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를 '노동당 제3차 세포비서 대회'로 각각 정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비롯한 최근 정세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근 우리나라(북한)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한 국가 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어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에 토대해 이제는 인민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우리의 자주권은 오직 제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철리가 다시금 확증됐다"고 덧붙임.

■ 김정은동향

- 1/23,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 등에게 '감사' 전달(1.23,중방)
- 1/27,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소집 및 지도(1.27,중통)
 - 김정은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음.
 - 최룡해(軍총정치국장) · 현영철(軍총참모장) ·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 박도춘 · 김영일(黨비서) · 홍승무(黨부부장) · 김계관(외무성제1부상) 등 참석

■ 기타 (대내 정치)

- 영농전투에서 선봉대·돌격대가 되기 위한 함남 함주군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 1.21 전용남(청년동맹중앙위원장) 등 참가下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1.21,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1강철직장 및 보산제철소 강철생산정형 요해(1.24,중통·중방)
- 黨 비서들, 1.27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1.27,중통)
 -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등
 - 군중을 당과 혈연적으로 더욱 굳게 이어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는데서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



나. 사회·문화

● 北, 원산 인근 마식령에 스키장 개발 계획(1/22, 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 인근 마식령에 스키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2일 밝힘.
- 박 사장은 "작년 12월 중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에게서 북한이 마식령에 스키장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함.
- 원동연 부부장은 당시 '스키 전문가인 김정은 원수님이 스키장 개발을 직접 맡기했으며 스키장을 건설할 장소로 마식령을 정한 것도 김정은 원수님'이라고 전했다고 박 사장이 밝힘.

● 北, 올해 주요 국내·국제경기 소개(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올해 국내에서 개최할 경기대회와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인 국제경기를 소개함.
- 통신은 "뜻깊은 올해에 많은 국내·국제경기들이 진행된다"라며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16일)과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을 맞으며 진행되는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에 이어 보천보화불상 체육경기대회, 제16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전승컵 체육경기대회,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경기대회와 선수권대회들이 개막된다"고 전함.
- 또 "조선 체육인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질 국제경기들에 출전한다"며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19살 미만 여자축구, 미라톤, 청년·청소년 역기(역도)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탁구, 레슬링, 역기, 수영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들과 체조, 활쏘기(양궁), 유술(유도), 사격 종목의 세계컵경기대회들, 국제육상경기대회를 비롯한 종목별 선수권대회와 경기대회들은 벌써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함.

● 北 공항서 외국인용 휴대전화 유심카드 판매 시작(1/22, 교도통신)

- 북한이 외국인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평양 순안공항에 외국인용 휴대전화 유심카드 판매 창구가 등장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평양 발로 보도함.
- 북한은 이전에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반입을 막았지만, 이달 들어 이를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집트 합작 휴대전화 회사인 고려링크는 최근 순안공항에 '이동통신'이라고 적힌 게시판이 걸린 창구를 개설하고 유심카드를 팔기 시작함. 또한, 외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유심카드를 집어넣으면 북한 내에서도 통화할 수 있음.

● 北 "자체 기술 공업용컴퓨터 '노을' 개발"(1/23,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고성능 공업용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제작했다고 노동당 기



관지 노동신문이 23일 밝힘.

- 신문은 이날 "최근 노을기술합작회사에서 성능 높은 우리식의 공업용 컴퓨터 '노을'을 개발했다"라며 "이번에 새로 개발된 '노을'은 일체식 컴퓨터로 종전의 공업용 컴퓨터들보다 우월하다"고 전함.
- '일체식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본체 등 모든 것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 있는 공업용 컴퓨터로, 사람이 기계를 조종하기 위한 장치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HMI(Human Machine Interface) 공업용 컴퓨터'라고도 부른다고 신문은 설명함.

● 北, 안보리 결의 연일 비난... "방방곡곡서 격노"(1/25, 노동신문)

- 북한은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연일 안보리 결의를 비난함.
- 신문은 이날 1면 상단에 전날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싣고 지면의 3분의 2 정도를 "방방곡곡에서 격노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안보리 결의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움.
-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김진범 부위원장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것은 합법적 권리에 따른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결의'라는 것을 조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치밀어오르는 격분을 누를 길이 없다"고 토로함.
-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리경철 실장은 "국제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의 그 어느 조항에도 '탄도미사일 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는 타당성 없는 논거를 들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고 주장함.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최성룡 부위원장은 "만약 원수들이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500만 자루의 총대가 되고 천만 개의 폭탄이 돼 단호히 짓밟아버릴 것"이라고 말함.

■ 기타 (사회문화)

-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원-연구사들의 서산성(적두산성) 발굴, '고구려시기에 축성, 고려시기에 이용' 등 과학적 고증(1.23,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작년 중국 곡물·비료 수입 전년比 30% 줄여(1/2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과 비료가 전년보다 각각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22일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최근 올린 '북한의 11월 대중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량은 25만7천931t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만2천282t과 비교해 26.8% 감소함.
 - 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1만8천606t으로 10월의 2만2천331t보다 17% 감소함. 또 이는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함. 지난해 수입 곡물의 종류별 비중은 옥수수 19.2%, 쌀 16.7%, 밀가루 56.2%, 콩 7.4% 등이었으며, 전년에 비해 옥수수·쌀의 수입 비중이 줄고 밀가루·콩의 비중이 늘었음. 비료도 지난해 11월 말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총량이 25만2천780t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만5천23t에 비해 28.8% 감소함.

- **北, 평양 주재 외교관 규제·관리 강화(1/22, 태양보(太陽報))**
 - 북한이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 해외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22일 홍콩 태양보(太陽報)가 보도함.
 -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평양 주재 외교공관과 공관 직원들에 대해 카메라와 비디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부착된 통신장비와 해외에서 쓰던 휴대전화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 또한,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는 차량과 중고차, 한국산 자동차의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함.

- **北, 박상권 평화차 사장에 평양시 명예시민증(1/22, 연합뉴스)**
 - 북한이 오랫동안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에 작년 말 평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미국 시민권자인 박상권 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작년 12월18일 평양 민수대의사당에서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평양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며 "그날 명예시민증 수여 의식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해 축하해줬다"라고 밝힘.
 -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외국 국적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 사장이 공개한 평양시 명예시민증에는 '002'라는 일련



- 북한은 자체 제작 부품 외에 중국과 유럽 등 5개 국가에서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에 필요한 10개 상용부품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들 부품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TCR)에 저촉된 부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北 ICBM 엔진설계 구조 드러나(1/21, 연합뉴스)

- 북한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로켓)의 엔진설계 구조가 실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장거리 미사일 엔진구조가 이번에 고스란히 외부세계에 노출됨. 국방부가 21일 공개한 잔해 조사결과 이 로켓은 엔진으로 주엔진 4개, 보조엔진 4개 등 8개를 사용했으며, 추진력은 주엔진 108t(4개×27t), 보조엔진 12t(4개×3t) 등 120t 규모로 추산됨.
- 북한이 1990년대 초반 개발한 노동미사일의 엔진과 같은 주엔진의 도관(導管)은 무게를 줄이려고 가늘게 제작됐고 모세혈관 식으로 배열함. 이 도관으로 압축공기와 산화제, 연료가 주입되도록 했으며, 주엔진에 들어있는 터보펌프와 산화제 유량조절기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됨.
- 특히 주엔진 사이에 장착된 4개의 보조엔진은 로켓의 방향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함. 각 3t의 추진력을 발휘하는 4개의 엔진은 상하 36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됐으며 내부에는 자동조종 장치(자이로시스템)가 들어 있음.

● 조총련 기관지 "北, 작년 美에 핵문제 관련 최후통첩"(1/21,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해 미국 NSC(국가안보회의)와 CIA(중앙정보국) 관계자를 통해 핵 문제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정전 60년을 평화실현의 원년으로/ 조선의 경제부흥전략과 전쟁종결'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시대의 조선은 지나간 조(북)미 회담 역사를 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핵 문제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미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힘. 또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경우, 조선의 핵보유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비핵화 논의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에게도 이미 전달됐을 것"이라며 "창조와 변혁을 오늘의 시대어로 정한 조선은 안보문제에서도 현상타개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올해는 2기 오바마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외교공세가 보다 더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바마 정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치러진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유엔 대북제재 강화..北 비핵화포기·핵실험 시사(1/2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



- 택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이에 대해 북한은 23일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핵 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 다음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음.
 -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새벽) 채택한 결의 2087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활동 전면 중단,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함. 또한, 이번 로켓 발사를 주도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함.
 -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등의 조치도 포함됨.
- **北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메우고 케이블 빼낸 상태(1/2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발로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은 현재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를 끝냈다"면서 "김정은이 정치적 결심만 하면 수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힘. 특히 이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뚫던 갱도(坑道)를 다른 데서 옮겨온 흙과 콘크리트로 메웠으며, 갱도에서 케이블을 빼낸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함.
 - 그러나 갱도를 콘크리트로 메우고 케이블을 빼낸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조선신보 "조선반도 평화보장 대화는 열려 있어"(1/23, 조선신보)**
- 북한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한 것과 달리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됨.
 - 신문은 이날 '〈비핵화종말〉, 악습반복이 초래한 사태'라는 글에서 "과거에 수없이 되풀이되어온 제재와 자위적 대응의련쇄반응을 차단할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면서 "조선은 '비핵화논의'는 없다고 하였지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외무성 성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미국 겨냥한 높은 수준 핵실험 진행할 것"(종합)(1/2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정오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천명했다고 일제히 전함.

● **北 "핵실험은 민심의 요구...다른 선택 없어"(1/26, 노동신문)**

- 북한이 "핵실험(실험)은 민심의 요구이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핵 실험 강행의지를 노동신문을 통해 26일 노골적으로 천명함.
- 신문은 이날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핵실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인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힘. 또한, "유엔 안보이사회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유를 더는 주지 않았다"며 "우리는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노동신문 "범죄 온상' 주한미군 철수해야"(1/2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남조선 강점 미군이아말로 남조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민들을 타락시키는 범죄의 온상"이라며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함.
- 신문은 이날 '범죄 무리를 내쫓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강점 미군 병사가 미약을 몰래 반입하다가 발각됐다. 밀수통로는 미군의 군사우편이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힘.

● **탈북자 4명 또 재입북...평양서 기자회견(1/24,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탈북자 부부와 그들의 딸, 또 다른 탈북 여성 등 4명이 북한으로 귀환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24일 보도함.
- 방송은 "괴뢰패당의 회유책동으로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공화국으로 돌아온 김광호 부부와 고경희 여성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며 "지금 괴뢰패당의 비열한 모략책동으로 남조선에 끌려갔던 우리 주민들이 남조선 사회와 결별하고 공화국의 품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다"고 전함.
- 기자회견에서 김광호는 "2009년 8월 아내와 함께 남조선으로 나갔다가 지난해 말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라며 자신의 아내와 10개월 된 딸을 소개했고 고경희는 "2011년 6월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지난해 말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힘.
-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에만 탈북자 재입북 사례는 6월 박정숙, 11월 김광혁-고정남 부부의 재입북에 이어 세 번째이며 인원으로는 8명



에 달한다. 또 지난해 7월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전영철까지 포함하면 탈북자 출신의 기자회견은 김정은 체제 들어 이번이 네 번임. 37세의 김씨는 함경북도 연사군이 고향이라며 "남조선은 정말 더러운 세상이었다.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함.

- 그는 자신들을 한국으로 데려간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회 회장에게 브로커 비용을 다 지급하지 못해 법정애까지 갔지만, 결국 재판에 저 집을 빼앗겼다고 주장함. 이후 김씨 부부는 작년 6월 재입북한 박정숙씨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재입북을 결심했다고 말함.

● 北 "南 유엔제재 동참시 물리적 대응조치"(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남한에 대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괴뢰 역적패당은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를 실현시켜보려고 악을 쓰며 동분서주했다"며 이같이 주장함.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 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거듭 위협함.
- 또 "남조선 괴뢰보수패당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 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앞으로 북남 사이에 더이상 비핵화 논의 없을 것"이라며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주장함. 이어,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이 반공화국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누구와도 절대로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족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적대정책 포기'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움.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 여자·유소년축구 北 거부로 '무산, 연기'(1/24, 연합뉴스)

- 24일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치르기로 했던 남북 여자축구대회가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 도립대 여자축구팀과 북한 4·25여자 축구팀 간 개막 경기를 하기로 했으나 북측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개막식은 개회선언으로 끝났고, 개막 경기는 도립대학과 중국팀 간 경기로 마침.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최근 남한과 중국(1.19, '선전 위성TV' 등)의 일부 언론들의 '김정은 성형수술(김일성 닮기) 의혹' 보도들에 대해 '反北 모략선전, 쓰레기 언론들의 너절한 매문행위'라고 맹비난 및 언론 위협(1.23, 중통)
- 北 「조평통」 성명(1.25),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관련 '南 정부 위협 대응조치' 발표(1.25, 중통·중방/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다)
- ① 남북간 비핵화 논의 중단(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전면무효화 선포)
- ② 反北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그 누구와도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
- ③ 역적패당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임.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南 유엔제재 동참시 물리적 대응조치"(1/25, 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남한에 대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괴뢰 역적패당은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를 실현시켜보려고 악을 쓰며 동분서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조평통은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담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거듭 위협함.
- 유엔의 이번 대북결의에는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 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이 이날 남한을 겨냥해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선박 검색 등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조평통은 또 "남조선 괴뢰보수패당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 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앞으로 북남 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양측은 1991년 12월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며 이듬해인 1992년 2월19일 발효시켰음. 조평통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이 반공화국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누구와도 절대로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족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적대정책 포기'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웠음.
- 북한은 앞서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비핵화 합의 파기, 추가 핵 실험 등을 거론하며 미국 등을 비난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北, 히로시마 능가하는 핵기폭장치 실험 가능성"(1/27, 연합뉴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고농축우라늄(HCU)이나 폭발력을 크게 높인 플루토늄 기폭장치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러시아 군사전문가가 예상함.



- 러시아의 핵미사일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사회정치연구센터' 소장은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 등에 단호함을 보이려는 정치적 목적과 그동안 축적한 HEU나 플루토늄 등을 이용한 핵무기 기폭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 등에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함. 그는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핵탄두 시험은 아직 북한이 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기술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함.
- ◇ "폭발력 높은 플루토늄 기폭장치 실험 가능성 커" = 지난 2001년까지 핵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영하는 전략미사일군 중령으로 근무하다 예편한 뒤 민간 군사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브세예프 소장은 "북한이 아직 HEU를 이용한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 이번에 HEU 기폭장치를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HEU를 무기급(90%)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시적 핵폭탄에 이용할 수 있는 80% 농도까지라도 농축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HEU 실험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음.
- 예브세예프는 "플루토늄의 경우 북한이 이미 40kg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플루토늄용 기폭장치 실험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이 경우 그동안의 핵기술 진전을 보여주기 위해 폭발력을 크게 키운 실험을 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음. 그는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의 실제 폭발력이 10 킬로톤(kt) 이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이를 20 kt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음. kt은 TNT 폭약 1000톤(t)의 폭발력을 의미함.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폭발력을 2~6 kt으로 평가한 바 있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 정도였음.
- ◇ "핵탄두 소형화 못해 탄두 시험은 어려울 것" = 예브세예프는 일각에서 제기한 핵탄두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직 ICBM에 장착할 정도로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의적 견해를 밝혔음. 그는 "파키스탄이 1998년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탄두를 만들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그들이 보유한 탄두를 완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북한은 첫 핵실험을 한 지 겨우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함.
- 그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무게와 직경을 소형화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기"이라며 "무게는 어떻게 소형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탄두의 직경을 줄이는 것은 더 힘든 과제이며, 또 ICBM에 실린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마찰열에 타지 않도록 탄두에 열차단 보호막을 씌우는 기술은 더 고난도"라고 설명함. 고도 1천~1천500km의 우주공간까지 올라갔다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ICBM의 경우 탄두가 초당 수 km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열차단 보호막이 없으면



대기권에서 미찰열을 견디지 못해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임. 또 탄두가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려면 일정 수치 이하의 직경과 형태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임. 예브세예프는 "제대로 된 핵탄두를 만들려면 수많은 비행 시험을 해야 하며 옛 소련도 수백 차례의 시험을 거쳐 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며 "북한이 아직 그런 시험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함.

- ◇ "은하-3호 실제 사거리 6천km 이하" = 예브세예프 소장은 이어 한국 전문가들이 서해 상에서 건져 올린 북한의 은하-3호 로켓 잔해물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500kg 이상의 탄두를 싣고 1만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평가함. 그는 "은하-3호 로켓은 지난 2010년 이란이 공개한 '시모르그' 로켓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며 "서방 평가에 따르면 시모르그 로켓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경우 사거리가 5천km(탄도 무게 750kg일 때)~5천400km(탄도 무게 500kg일 때) 정도로 추정돼 시모르그의 변종으로 보이는 은하-3호가 1만km 이상을 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함. 그는 "북한이 시모르그와 은하-3호 1단에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미사일 엔진의 성능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최대 사거리가 6천km(탄도 중량 500kg)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음.

● 北 "김정은,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1/27,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비롯한 최근 정세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최근 우리나라(북한)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결심이나 그가 제시한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23일과 24일 외무성 성명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제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의 결심이 핵실험 실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중앙통신은 이어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에 토대해 이제는 인민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우리의 자주권은 오직 제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철리가 다시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자 외무성 성명을 내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24일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



(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면서 3차 핵실험을 사실상 예고함.

- 최근에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으며 26일자 노동신문은 "핵실험이 민심의 요구이고 다른 선택은 할 수 없다"면서 핵실험 강행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이번 협의회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영일 당 국제비서, 홍승무 당 부부장, 김계관 내각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참가했음. 그러나 북한 김정은 체제의 최고 권력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은 이날 협의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나. 미·북 관계

● 北노동신문 "'범죄 온상' 주한미군 철수해야"(1/21,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남조선 강점 미군이야말로 남조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민들을 타락시키는 범죄의 온상"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음.
- 이 신문은 이날 '범죄 무리를 내쫓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강점 미군 병사가 마약을 몰래 반입하다가 발각됐다. 밀수 통로는 미군의 군사우편이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힘.
- 또 "냉전이 종식된 지 오랜 지금 미국에는 남조선에 군대를 계속 못박아 둘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가리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최근 신종 마약을 군사우편으로 위장,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주한미군 부부 등이 당국에 적발됐음.

● 북한, 성명을 통해 대미 위협(1/24, 산케이신문)

- 북한 국방 위원회가 24일에 발표한 성명은, 2기째가 발족한지 얼마 안된 오바마 미 정권을 강하게 의식한 것임. 이번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난 한 23일의 외무성 성명에 상응되는 것으로, 과거 2회의 실험 전에는 내지 않았으며, 국가 최고 기관인 국방 위원회의 성명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연일의 성명은, 북한의 "진심도"를 미국에게 전하려고 하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음.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체제 존속에 있어서 최대의 위협요인인 미국으로부터의 군사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임. 북한은 지금을 "전시" 라고 보고, 체제의 안정에 빠뜨릴 수 없는 평화 협정 체결을 향한 교섭의 테이블에 미국 측을 도착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성명에서는, 현재는 "반미 투쟁의 새로운 단계"이며, "위성과 장거리 로



켓, 높은 수준의 핵실험은 적인 미국을 노리게 된다"라고 위협하고 있음. 주한 미 정부 관계자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장거리 로켓이라는 말을 대미 공격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또, 장거리 로켓과 별도로 쓰여진 "위성"은, 미사일의 탑재물인 탄두를 의미한다고 보이며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핵실험의 목적은, "탄두로서 탑재할 수 있도록 핵을 소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석함. 작년 12월에 발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중량 500~600킬로의 탄두를 1만 킬로 이상 날리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짐에 따라 발사의 성공이 북한에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여겨짐. 미사일에 이어, 핵실험을 성공시켜, 김정은 제 1 서기의 권위 부여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임.

다. 중·북 관계

- **中, 조선 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협상에 적극 동참해(1/22, 신화망)**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조선의 위성 발사 선포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으며, 이 같은 입장에 근거해 얼마 전 안보리 관련 협상에 적극 동참했다고 전함.
 - 한 기사는 "중미 양국은 조선 위성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초안에 합의하고, 안보리는 조만간 본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라고 질문함.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 위성 발사 선포 관련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조선이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하는 상황에서 발사를 감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리가 신중하고, 적절한 태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며, 또다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중국의 입장에 근거해 얼마 전 안보리 관련 협상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답변함.
 - 또한 한국 측이 조선의 위성 발사 로켓 잔해물에서 중국 및 유럽산 부품을 발견했다는 한국 언론매체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 정황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는 기자의 요청에 대변인은 "중국의 확산 방지 관련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백하다. 중국은 완벽한 수출 규제법 및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명단은 국제사회와 동일하다"라고 답했음.

라. 일·북 관계

- **납치 대책 본부, 전 각료 참가에 조직 강화(1/26, 산케이신문)**
 - 정부는 25일 오전의 내각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의 해결을 향한 "납치 문제 대책 본부"(본부장·아베 신조 수상)를 전 각료가 참가하기로 결정하며 조직 강화를 꾀했음. 수상은 관에서 열린 본부의 첫 회담으로 "내가 최고 책임자일 때에 해결을 하고 싶다. 일각이라도 빨리 납치 피해자의 생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하나가 된 대처를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함.
 - 민주당 정권에서는, 본부장인 수상과 부분부장(외상, 관방장관, 납치 문



제 담당상)의 3 각료가 멤버였지만, 본부원으로서 전각료가 참가하는 태세로 확충하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는 자세를 어필하고자 하였음. 대책 본부와는 별도로, 납치 문제를 잘 아는 야당 의원이 참가하는 초당파의 회의 "정부·여야당 납치 문제 대책 기관 연락 협의회"의 신설도 결정함.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외무차관 "안보리 결의 北 반응 유감"(1/24,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 겐나디 가틸로프 외무차관은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그는 이어 "러시아는 평양과의 접촉과 다른 모든 국제적 모임에서 대화 과정을 지속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준이 낮아지고 협상 지속 입장이 우위를 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 한편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레이니트 칼리슈니코프 부위원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선언은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말만의 '무력과시'라고 예상함. 그는 "또 다른 핵실험 선언은 만약의 군사개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함. 칼리슈니코프 부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에 핵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이에 필요한 기술도 운반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지금까지 계속돼온 요란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일축함. 그는 북한의 새 지도자(김정은)는 국제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발표한 성명에는 이전 북한 정권의 대외정책 노선의 메아리가 남아있다고 꼬집었음.
- 하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빅토르 자바르진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그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바. 기 타

● 한·미·일 안보대화..北 핵·미사일 공조방안 논의(1/27, 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 국방당국의 차관보급 인사가 이달 말 도쿄에서 모여 북한 핵실험 등 역내 안보현안을 논의함.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오는 30~31일 도쿄에서 열리는 차관보급 안보대화에선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며 "지역 안보정세와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등 3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미·일 안보대화는 3국 안보협력 차원에서 2008년 이후 매년 한 차례 열리고 있음. 올해 참석자는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미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정책국장 등임.
- 이 자리에서 3국은 북한이 예고한 핵실험이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3국은 북한 핵실험 공조 방안과 함께 테러와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의 안보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차당선인, 이한구 등 정책협의대표단 美파견(1/2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함.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이 정책협의대표단을 조만간 미국에 파견할 예정"이라면서 "양측은 시기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우리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함. 구체적인 방미 시기와 일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 정책협의대표단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단장이고 같은 당 나성린 의원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이정민 홍용표 전문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됨. 정부에서도 외교부 차관보 등 관계자들이 동행함
- 박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당선인의 외교철학을 잘 알고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동행하는 이정민 홍용표 인수위 전문위원도 외교안보 공약 작성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고, 새정부 정책에 대해 미국과 문제를 논의할 책임자로 당선인이 판단하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함. 명칭은 특사가 아니지만 대표단은 특사보다 더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 대표단 측의 설명임. 이 원내 대표측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표단은 단순히 당선인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 형태가 아니라 미국과의 한미정책협의 차원"이라고 말함. 실제 이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방미 목적에 대해 "경제·대북·외교·국제정치 등 전반적인 것을 논의할 것이며, 정책의 줄거리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대표단은 방미 기간 박근혜 당선인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상반기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 공조 등 대북협력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미국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대표단은 미 정부



- 측과 사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정식명칭이 특사는 아니더라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 당선인의 친서를 가지고 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됨. 박 대변인은 대표단의 오바마 대통령 면담 여부에 대해 "일정을 논의 중"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특사를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견하는 모습을 갖지는 않을 것이며, 요청이 있고 필요성이 있을 때 파견할 것"이라고 밝힘.

나. 한·중 관계

- **양제츠, 김무성 특사 면담 "양국관계 더욱 발전할 것"(1/22, 인민일보)**
 - 외교부 양제츠(楊潔篪) 부장은 21일 베이징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무성을 회견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음.
 - 양제츠 부장은 "중한 수교 20년 간 양국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고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양국 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성숙해져 양국 및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였다"고 말함. 양 부장은 또한 "중한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서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양국 정상의 관심과 노력으로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김무성 특사는 "한중 관계는 과거 20년 간 세계가 놀랄 만한 발전을 거두었고, 현 상황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함.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첫 번째 특사를 중국에 보냈다는 점을 보더라도 양국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힘.
 - 지역 정세에 관해 양제츠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일관적인 입장을 취하며 중국은 남북 간 관계 개선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함.
- **〈중국, 고구려비 연구에 동북공정 학자 투입〉(1/25, 연합뉴스)**
 - 중국이 비공개로 '제2 광개토태왕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고구려사 왜곡 논란을 빚은 동북공정(東北工程) 참여 학자들을 연구팀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중국이 새 고구려비의 연구 결과를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이 발족시킨 연구팀은 웨이춘청(魏存成) 지린대 교수, 경테화(耿鐵華) 통화(通化)사범학원 교수, 지린성 문학·역사연구소 직원 장푸여우



(張福有), 쉬젠신(徐建新) 중국사회과학원 지도교수, 쑨런제(孫仁杰) 전 지안시 박물관장, 왕즈민(王志敏) 지린성 문화재 감정위원회 위원 등 학자와 문화재 담당 관리로 구성됨.

- 이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웨이 교수와 경 교수임. 고구려·발해사, 위진·수당 전문가로 손꼽히는 웨이 교수는 과거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한 동북공정의 핵심 인사 가운데 하나임. 고구려사 전문 학자인 경 교수도 동북공정의 대표적 참여 학자임.' 고구려사 귀속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의 저작을 펴내기도 한 그는 중국에서 고구려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학자로 평가됨. 그는 동북공정의 결과물로 2003년 '호태왕(好太王·광개토대왕)의 제사'라는 서적을 출간하기도 함. 연합뉴스의 확인 결과 그는 2007년 학술지 통화학회보에 기고한 '고구려 문화유산과 보호 및 계승'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고구려는 동북 지방의 소수 민족 정권"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폈음. 이 밖의 연구팀의 다수 학자도 동북공정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짐.
-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임. 우리 말로는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로 번역됨.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주도하고 동북 3성의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음. 동북공정은 고구려사를 한반도 역사에서 분리해내고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선언함으로써 한국 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한중 간 첨예한 역사 갈등을 촉발시켰음. 따라서 동북공정의 주요 이론가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새 고구려비의 역사적 의의를 중국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낼 것은 명약관화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됨.
-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벌써 현실화됐다고 지적함. 국가박물관이 발행하는 중국문물보는 고구려와 '중원'과의 연계성이 밝혀진 것을 이번 고구려비 발견의 중요 의의로 평가함. 중국문물보는 "비석 형태가 동한 시대 이래로 널리 쓰인 판상형을 띠었다"며 "이는 고구려와 중원과의 문화적 연결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함. 이 신문은 또한 "지안 고구려비는 예서체의 한자로 쓰여 이는 고구려가 예서체 한자를 국가 서체로 삼아 정령을 발표하거나 대외 교류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뜻한다"고 해석함. 연구 초기 단계에서 나온 이런 언급은 중국이 어떤 시각에서 이번 연구에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임. 따라서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중 간 고구려사 귀속 문제에 대한 이견이 고구려비 발견을 계기로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음.
- 한국 학계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졌음. 동북아역사재단의 고광의 박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새 고구려비의 모양이 판상형을 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화시킨 것이라고 반박했음. 그는 또한 비석의 예서체도 한(漢)대의 전형적인 예서체가 아니라 독특한 고구려 예서 형



태를 띠고 있다고 분석함. 한국고대사학회는 비석 분석 회의를 준비 중이며 고구려발해학회도 다음 달 긴급 학술회의를 열 예정임. 동북아역사재단도 중국 측에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은 동북공정이 끝난 후에도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음. 작년 6월에는 국가문물국이 고고학 조사를 토대로 만리장성을 서쪽으로는 신장위구르족 자치구까지, 동쪽으로는 지린성, 헤이룽장성까지 연장해 발표하면서 한국 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음.

다. 한·일 관계

● 도쿄도, 교과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표현 삭제(1/25, 연합뉴스)

-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와 센카쿠 영유권 주장은 대폭 늘리면서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표현은 없애기로 함.
-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4일 고교 일본사 부교재인 '에도에서 도쿄로'의 조선인 '학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함. 변경하는 부분은 '간토대지진의 사적을 방문하자라는 칼럼 중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자 추도비'에 관한 문장임. 올해까지는 "(1923년) 대지진의 혼란 와중에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됐다"고 적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비석에는 대지진 와중에 '조선인이 귀중한 목숨을 빼앗겼다'고 적혀 있다"는 문장으로 바꾸기로 함.
- 도쿄도 교육위원회 고교 교육지도과가 관련 문장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결정함. 부교재를 감수한 전문가에게는 상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고교 교육지도과 담당자는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여러 설이 있고, 살해 방법을 모두 학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학살이라는) 단어가 잔혹한 이미지를 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함.
-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간토대지진 관련 보고서에서 유언비어에 의한 살상 사건 대상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으며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사례가 많았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함.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83) 릿쿄대 명예교수도 "잔혹한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역사로부터 배울 수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함.
-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또 같은 교과서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기존 2줄에서 22줄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는 1923년 9월1일에 간토대지진(규모 7.9) 이후 사회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인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거나 '우물에 독을 집어넣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렸음. 이에 흥분한 일본인들이 제일 조선인 2천600~6천600여 명을 학살함.



- "일자민당 간부들,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예정"(1/27, 연합뉴스)
 - 내달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리는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간사장 대행과 청년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정권은 지역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차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 이행을 유보한 데 이어 시마네현 주최 행사에도 각료 등 정부 관계자의 출석은 자제할 계획임.
 - 대신 시마네현이 지역구인 호소노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청년국장 등 당 간부들이 올해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은 지난해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했음.

라. 미·중 관계

- 힐 前차관보 "中과의 협력 통해 북핵 해결 도모해야"(1/25,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의 진정한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야심차게 천명한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인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이 불필요하게 '중국 포위' 전략으로 비치게 된 것은 미국의 실책이라고 지적함.
 -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현재는 덴버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학장으로 재임 중인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젊은 코리아 아메리칸 리더들의 모임인 '세종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 소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개최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함. 그는 현재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이 하는 역할에 대해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중국과 제로섬 게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진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 힐 전 차관보는 과거 미국이 중국의 성장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으면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리는 요청마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된다고 지적함. 그는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제고되고 결국에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도록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힐 전 차관보는 "지난 2005년 합의한 북핵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이 나열돼 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상호 단계적인 이행(시퀀싱)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것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오바마 행정부에 주문함.
 -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보좌관을 지낸 필립 윤 플라우세어스 재단 사무총장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



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함.

마. 미·일 관계

● 美 의회, 일본군 위안부 재결의안 추진(1/24, 연합뉴스)

- 미국 연방 의회가 지난 2007년에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보강한 제2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함.
-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뉴욕 소재 한인단체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회장 이철우)'의 대표단을 면담하고 '제2의 위안부 결의안(The Second Comfort Women Resolution)'에 찬성 입장을 밝힘. 이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2007년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달라진 게 없는 만큼 다시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며, 로이스 위원장은 즉각 "공동 발의(co-sponsor)에 참여하겠다"고 답함.
- 또 민주당하원선거위원회(DCCC) 의장을 맡고 있는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의원도 이날 이 회장 등을 만나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면서 "만약 다른 의원이 발의한다면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힘. 이처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 내에서 '실세'로 꼽히는 두 의원이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5년여 만에 초당적인 위안부 결의안이 다시 한 번 채택될지 주목됨.
- 미국 하원은 지난 2007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KAPAC는 결의안 내용과 관련, 첫번째 결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편 최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반대 입장이 포함되도록 미국 의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이 회장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두번째 위안부 결의안 추진은 일본에 망신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함. 그는 또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왕복하는 마리톤대회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언론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 KAPAC 대표단은 이날 로이스 위원장, 이스라엘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오하이오) 의원 등을 면담하고 ▲제2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대북 경제제재 강화 ▲탈북자 보호대책 ▲이산가족 상봉 ▲미국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보 등 5대 요구 사항을 전달함. 이 회장은 "대북제재 강화와 탈북자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는



면담한 의원들이 모두 지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함.

바. 미·러 관계

● "러, 美의 비우호적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1/23, 연합뉴스)

- 러시아는 미국의 비우호적 행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밝힘.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러-미 관계에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과 러-미 양국의 인권법 채택 문제 등을 꼽았음.
-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 구축하려는 MD 시스템이 자국 핵전력 약화를 노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양국은 또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에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對美) 인권법을 입법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증오스런 마그니츠키법 채택에 따른 부정적 여파들은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은 반(反)소련 법인 '잭슨-베닉법'을 반러시아 법인 '마그니츠키법'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음. 미국은 지난해 말 냉전시절 채택한 대러 무역 제한법인 '잭슨-베닉 수정안'을 폐지하면서 대신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한 바 있음. 라브로프는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의 비우호적 행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의 바탕에는 평등과 상호 이해 존중, 내정 불간섭 등의 기본적 원칙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국제무대에서의 행동 조율에 대한 관심 등이 남아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음.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버락 오바마의 방러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임.

사. 중·일 관계

● 中 "다오위다오 수호할 능력 갖추고 있다"(1/22, 인민일보)

- 21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 해결과 관련 중국정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요구사항 질문에 대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영유권 분쟁 해결을 줄곧 주장해 왔고, 중일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 홍 대변인은 "중국의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중국은 국가 영유권 수호에 대한 의지와 결심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줄곧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



- 일 양국은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측이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냉정한 태도로 성의를 보이며 중국 측과 함께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관할권 문제 해결방안을 찾길 희망한다"라고 전함.
- 한 기자는 "일본 외부성 대변인이 중국의 군사력 건설로 인해 이 지역의 안보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국은 위협적인 수단으로 일본 '영해', '영공'에서 물리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기존 질서를 바꾸려 한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라고 질문함. 이에 흥 대변인은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로 그 영해 또한 중국의 영해다. 중국 공무선의 다오위다오 영해 내 순찰은 중국의 관할권을 이행하는 정당한 공무수행이다. 장기간 중국은 다오위다오 및 그 영해에 대한 일본의 주권 침해 행위에 절대적으로 반대해 왔고, 일본의 이른바 '존재감' 및 '관할권'은 처음부터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으로 중국은 다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수호할 능력을 가진 것은 물론 이를 다짐하는 바다"라고 밝힘.

● 중국 "센카쿠 해결 후세에 맡기자" 일본에 제안(1/25,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일본에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문제의 유보를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24일 베이징을 방문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와 회담에서 "지금까지 (센카쿠 문제)를 유보함으로써 양국의 우호가 유지됐다"고 말함. 그는 이어 "지금 세대에서 지혜가 없어 해결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함.
-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취한 작년 9월 이전으로 센카쿠 영유권 문제를 환원한 뒤 현상을 유지하자는 뜻으로 보임. 이는 야마구치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지난 21일 "센카쿠 문제의 해결을 장래 세대에 맡기는 것이 당장 예기치 않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임. 야마구치 대표는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을 바꿈.
- 자민당과 연립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면담하고,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서를 전달함. 작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일본 여당 대표와 회담하는 것은 처음임.

아. 기 타

● 日·대만, 센카쿠 해역서 또 '물대포 충돌'(1/24, 연합뉴스)

- 일본 순시선과 대만 경비선이 24일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서로 물대포를 쏘며 대치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함. 대만 중화다오위다오보호협회와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세계중국인다오위다오보호연맹 회원 4명, 승조원 등 모두 7명이 탄 대만 어선 '취안자푸(全家福)



호가 센카쿠 상륙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5분(현지 시간)께 이 섬 전방 28해리 지점을 지나던 중 일본 순시선 8척의 저지를 받았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이 전함.

- 이 과정에서 일본 순시선은 물러갈 것을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한 뒤 대만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음. 이에 어선 보호를 위해 현장에 급파된 대만 경비선들도 물대포로 응사했다고 대만 해안순방서(해경)가 밝힘. 양측은 지난해 9월에도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에 반발한 대만어선 60여 척이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영해에 진입하면서 물대포로 맞서는 충돌 상황을 빚은 바 있음.
- 이날 활동가들을 태운 취안자푸호가 일본 순시선의 저지선을 뚫고 10여 해리를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추격전 상황도 연출됐음. 이 어선은 추격과 대치 1시간 20여 분만인 오전 11시30분께 귀항을 위해 뱃머리를 돌렸음. NHK 등 일본 언론은 대만 경비선 6척이 현장에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나, 대만 당국은 경비선 4척이 파견됐으며 사전에 계획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함.
- 대만 해안순방서는 만일의 사태 등에 대비해 비상 상황실을 꾸려 가동함. 일본 측도 정부 내에 임시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양측의 접촉 상황 등을 주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음. 일본 당국은 특히 이날 오전 센카쿠 근해에 중국 해감선(海監船·해양감시선) 3척이 순찰 활동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대만과 중국 양안 선박이 동시에 센카쿠 해역에 진입해 주권 주장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바짝 긴장한 것으로 전해짐. 일본은 이번 사태와 관련, 일본 대사관 격인 일본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를 통해 양국 간 어업회담 재개를 위해 준비 중인 예비접촉 일정이 연기되는 등 양국 현안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대만 외교부는 "일본 측이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희망하며, 양국 간 어업회담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논평함. 취안자푸호는 이날 오전 1시45분 대만 북부 신베이(新北)시 루이팡(瑞芳)구 선아오(深澳)항을 출발함. 이 어선은 출발 당시 대만에서 해양 수호신의 의미가 있는 '마쭈 여신상'을 센카쿠에 설치해 어민의 안전을 기원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해 당국으로부터 출항 허가를 받았음.
- 센카쿠 일대는 최근 중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상공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 이어 일본이 중국 군용기의 센카쿠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사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연초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센카쿠는 대만 북단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섬으로 중국, 일본과 함께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